

## 변호사 선발제도, 더 늦기 전에 정비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 시대가 막을 연다.

2017년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 법조인선발제도는 변호사시험제도로 일원화된다. 변호사선발제도의 일원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지만, 법조 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법조 입문의 기회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 대안이 예비시험제도이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비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지향목표인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문제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이다. 과도기적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500명선인 현재의 선발인원은 우리 사회의 수용능력을 과도하게 넘어선다. 애초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 취지대로, 정부와 기업이 대량 배출되는 변호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 한, 적절한 선발기준과 인원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선발기준이나 난이도, 합격자 수에 대한 논쟁이, 어쩌면 우리 법조가 해마다 겪어야 할 연례행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착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먼저,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준법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 오 욱 환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진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도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가 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규 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여 법률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변호사실무를 비롯하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절차, 노동분쟁 사례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등 신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개월간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등 '준비된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능력 배양의 효과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발휘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변호사가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법치 국가 건설의 첫 삽이다.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 주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법률전문가들이 배치되어 법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의 채용이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으로 낭비되는 재화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투자임을 정부가 나서서 계도해야 한다. 특히 행정부처의 업무처리가 법적 적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법률가 채용이 시급하다.

이제까지의 관행과 편익의 구습에서 벗어나 법과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가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실현을 앞당기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